

정치적 셈법·소지역주의 끝내고 ‘역량’ 모아라

숨죽인 ‘지역 자산’ 다시 깨우자

② 여수세계박람회장

〈하〉활성화 해법

지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해법을 두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역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수를 통한 공공개발에 사후활용의 무게추가 기운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벌이고 있는 실익없는 공방을 하루라도 빨리 봉합해 여수광양만권의 공동성장, 기후변화대응 등 박람회 정신 구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후활용 어떻게 추진됐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두고 정부는 애초 박람회장 부지·시설 매각을 통한 선투자금 회수와 사후 청산에 방점을 찍었다.

선투자금은 박람회 개최비용 2조1,000억원 중

박람회로 얻어질 수익을 고려해 미리 국고에서 가져다 쓴 돈이다. 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비용 2조1,000억원의 상환분담 비율은 정부 30.27%(6,356억원), 민자 34.59%(7,264억원), 자체수입 35.14%(7,380억원)로 산정됐다.

자체수입은 박람회 입장료와 부지·건물매각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2년 당시 박람회 폐막 이후에 가능해 이 가운데 4,846억원을 국고에서 빌려 사용했다. 정부는 박람회 직후 시설·부지 등을 매각해 이를 상환 받는다는 방침이었지만, 2013년 9월 1차 공모서부터 민간개발사업자 공모에 실패했다. 이후 2017년 10월까지 모두 7차에 걸쳐 공모에 나섰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17년에는 복합 상업시설 구역에 4개 업체가 투자 의사를 밝혀 제안서를 받았으나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박람회 폐막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전체 매각대

정부, 선투자금 회수에만 매몰 ‘사후활용’ 손 떼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수 후 공공개발 방안 무게추 ‘주철현 특별법’ 서동용 결사저지 등 정치 공방만

상 부지 22만8,907㎡ 중 8.2%인 1만8,821㎡가 팔렸고, 매각대금 127억6,310만원은 모두 정부가 가져갔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지난 7년간 수익금 등을 더해 1,188억원을 상환해 현재 박람회장이 갚아야 할 부채는 3,658억원이다.

◆어떻게 가야하나=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두고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정부가 손을 놓고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자체의 개발 여력이 없자 차선책으로 제기된 방안이 해양수산부 산하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민간 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키웠다.

이 안은 해수부가 지난 2020년 실시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당시 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해 운영하면 2050년까지 6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금액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인 ‘수익성 지수(PI)’도 0.93~0.98로 예상돼 수익성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한 금액 1원당 회

수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PI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광양지역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어렵게 도출한 사후활용 방안이 다시 장기 표류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0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박람회장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서동용 의원 등 일부 반대 견해인 의원들로 인해 법사위 상정이 보류돼 사후활용 방안 마련 기간만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수익의 40%를 여수에서 얻고 있으면서도 투자의 95%는 광양 지역에 몰려있다. 불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다”며 “현재 지역민들과 전남도, 해수부 모두 항만공사가 주체가 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투자 노력도 있고 관리의 전문성도 있어 유일한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임채민 기자

또다시 500명대 도청 간부 확진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전환

광주·전남에서 사흘 만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500명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2·5면

23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316명, 전남에서 196명 등 총 5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로 500명대를 넘긴 최고 수치를 기록한 지난 19일(5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57명(누적 341명), 남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3명(누적 14명) 등 집단 감염이 지속됐다.

전남에서는 ▲목포 76명 ▲나주 25명 ▲무안 19명 ▲영암 16명 ▲순천 15명 ▲여수 13명 등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도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어선 2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하남3지구 제2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19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국장급 간부가 확진되면서 도청 내 감염자는 지난 18일 첫 발생 이후 4명으로 늘었다. 해당 국장은 부임 후 1년여 동안 만일의 감염에 대비해 줄곧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에서 오는 26일부터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잠복기는 짧고 전파력은 매우 센 오미크론이 연일 기승”이라며 “모임은 최대

한 자제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65명, 전남 122명이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오늘 수색 지원방안 첫 회의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실종자수색 등 현장수습을 총괄한다. ▶관련기사 2·5·7면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중수본은 실종 근로자 수색과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를 광주시에 교부해 수색·구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해 안전한 수색 환경이 마련되면 전국 구조인력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중수본에 편제돼 건축물·구조물 안전 점검 등에 대한 검토를 주관한다. 중수본은 24일 오후 3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구조 활동, 타워크레인 제거,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을 보고받고 수색·구조 계획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

